

大學의 근대화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 사회의 각 분야에서 改革이 진행되고 있다. 대학도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 대학 개혁의 방향을 大學의 近代化라는 용어로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겠다. 원래 근대화란 전체 사회의 발전과정에 적용되는 사회과학적 개념이다. 사회과학에서 근대화의 핵심적 의미는 정치적으로는 민주화를 뜻하고, 경제적으로는 산업화를,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사회구조의 분화와 통합과정을 뜻한다.

지난 50년 동안 한국사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근대화로 향한 발전과정이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많은 갈등과 대립을 경험하였고 또한 엄청난 희생을 치렀다. 우리 대학생들이 정치적 민주화를 위해 최선봉에서 희생을 치렀고, 우리 대학들이 경제적 산업화에 필요한 인재를 배출해 왔다. 민주화와 산업화의 결과, 한국사회의 전체적 구조는 동질적이고 단순한 것에서 고도의 이질적이고 복잡한 기능분화의 체계로 바뀌었다. 그러므로 우리 대학들이 한국의 근대화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대학들은 지난 50년 동안 자체의 근대화는 등한시하였다. 오히려 대학은 연구, 교육, 봉사라는 본래의 기능은 체제 놓고 외부와의 관계 및 내부의 위기관리에 전력을 쏟아왔다. 이젠 우리 대학들도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 근대화를 추진해야 할 시기에 왔다. 대학의 근대화란 무엇을 뜻하는가? 한마디로 연구, 교육 및 봉사라는 대학 본래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학의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 기본방향이 곧 대학 근대화의 지표가 될 것이다.

첫째, 自律性의 확보이다. 자율성이란 개체가 전체로부터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자자의 이성에 의해 스스로 보편적 원리를 세우어 이에 따르는 것이다. 따라서 전체는 개체들에 대해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만 제시하고, 통제자나 관리자가 아닌 후견인의 역할로 물러서야 한다. 대학의 자율성은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외부로부터의 자율성이다. 이것은 대학이 정부나 기타의 조직체들로부터 자율적이어야 함을 뜻한다. 다른 하나는 대학 내부의 자율성이다. 대학은 교수, 학생, 교직원이라는 이질적인 3개의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수들은 연구활동을 위한 '전문적 자율성'을 추구하고, 학생은 대학생살을 위한 '개인적인 유용성'을 행동의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교직원은 '행정의 능률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 내부의 자율성은 이 세 집단 모두가 자자의 고유성이 대학으로부터 간섭받거나 저해받아서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대학들은 이 자율성을 정립하려고 노력한 적도 없다. 오히려 스스로 포기한 감마저 든다.

둘째, 行政의 能率化이다. 대학도 조직이 거대해지다보니 행정체계가 관료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 결과 대학행정이 수단과 목적을 전도시키는 경우가 허다하다. 행정은 지향하는 바의 목표달성과 연관하여 규칙과 절차에 충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규칙과 절차도 목표달성의 수단으로 세워진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따라서 대학의 행정은 '무엇을 위해 일하는 것'으로 그 존재의 의미가 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행정은 교육, 연구 및 봉사라는 대학 본래의 기능이 능률



濟州大 總長 高 長 權

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셋째, 開放化이다. 대학은 혼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전체사회나 지역사회, 기타 다른 사회조직체들과 유기적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존재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들은 상아탑이라는 미명 하에 지금까지 전체사회, 지역사회, 다른 사회조직체들 및 심지어는 타대학에 대해서도 너무나 폐쇄적이었다. 이 폐쇄성은 학과간, 단과대학간, 교수들 개인간, 교수와 행정직원들 간 등 대학 내부에서도 존재해 왔다.

넷째, 雙方意思疏通 체계의 정립이다. 정부는 대학에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전달해 오고, 대학 내부에서도 대학당국은 교수와 학생들에게 일방적인 하향식의 정책전달 체계만 있을 뿐이다. 이해관계의 대립이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 당사자가 의사결정 기구에 다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쌍방의 사소통 체계를 우리 대학들은 갖고 있지 않다. 쌍방 의사소통 체계는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는 상호조건이면서 상호평가이고 또한 상호견제이다. 이것은 갈등과 대립을 제도적으로 흡수할 수 있고, 그 결과 갈등과 대립은 파괴의 원인보다는 발전을 위한 조연의 기능을 할 수 있다.

다섯째, 敎科內容의 제정비이다. 대학의 교과내용은 교육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구성될 때 비로소 합목적적이다. 우리 대학들의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이 과연 각 대학이 추구하는 교육이념에 합목적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음미해 보아야 한다. 더구나 학부에서의 전공이 너무 세분화됨으로써 배의 전체적인 모습은 모르는 채 배의 부속품에 대한 지식만 가지게 되는 방향으로 교과내용이 구성되어 있다면 이것은 교육내용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이다. 학부에서의 전공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시작이지 종착역이 아니기 때문에 배의 부속품은 대학원으로 넘기고, 학부에서는 배의 전체적인 모습을 그리는 데 충실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 문제는 수업의 내실화, 대학간의 개방, 학과간의 개방 등과 더불어 복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財源확보이다. 국립이건 사립이건 대학이 자체의 재원을 해결하지 않고는 위의 방향으로의 근대화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재원의 확보는 그 자체가 대학 근대화의 한 부분이라기보다는 근대화를 위한 필요불가결의 요건이다. 지금까지 대학들은 스스로를 재원의 수용자라고만 생각하여 왔다. 이젠 대학은 재원의 창출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재단이나 총장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총장, 학처장, 학과장을 위시한 전체 교직원들이 모두 함께 뛰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체간의 자유경쟁의 원리가 대학의 재원확보에도 도입되어야 한다.

대학들이 위와 같은 방향으로 근대화 체계를 갖추면 각 대학은 교유의 교육이념과 목표, 각자의 처해있는 여건 등에 따라, 다른 대학들과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공통성을 제외하고는, 차별있는 개별대학으로 될 것이다. 그 차별성은 또한 미국대학도 아니고, 독일대학도 아니고, 일본대학도 아닌 한국대학의 교유의 특징이기도 할 것이다. ■